[산업경제]

지방투자보조금,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확 바뀐다
–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방경제 활성화 기대 –

앞으로는 투자는 많이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.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「지방투자촉진 보조금」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'지역 일자리 창출형'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.

○ 그동안 '투자액' 중심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앞으로는 '투자액' 과 '고용창출 규모' 를 함께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.

○ 따라서 보조금 신청기업은 신청서에 제시한 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, 고용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일부 환수될 수도 있게 된다.

○ 보조금 지원의 지역 편중문제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의 지역 편중문제 해소를 위한 시책도 함께 포함돼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여러 지역에 골고루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그동안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기업유치가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.

* 지원 저조지역에 대해 국비 매칭비율 및 기업 지원 비율 5%p 추가지원

* 지원 저조지역 : 부산, 대구, 울산, 경남, 경북, 광주, 제주

○ 이번 제도개편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원거리 지역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,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자체 입장에서도 국비 매칭 비율이 늘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.

○ 보조금의 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제도개편 시 △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, △지역별 보조금 先배분 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, 그간 보조금 지원이 미미했던 지역에도 보조금이 골고루 지원되는 효과를 거둔바 있다.

* 지원 금액('10→'11, 억 원) : 부산(0→78.2), 광주(3.9→65.3), 대구(0→53.5), 경북(1.9→130.6)